

대학 여성운동을 역사화하기: 대학 사회 및 한국 여성운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 다 울¹ · 이 나 영² 중앙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학 여성운동이 정치·사회적 변동 속에서 '대학(운동·사회)'과 '한국 여성 운동'이라는 이중적 기회구조와 역동적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대학 여성운동은 진보 여성운동의 성장과 함께 사회 변혁을 통한 여성해방을 목표로 태동했으나 민주화 운동의 열망 속에 여성문제의 독자성을 내세우지는 못했다. 1990년대 이후 진보 여성운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성 억압을 전면에 내세우며 여성문제의 독자성과 독립적 조직을 강조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진보 여성운동의 제도화와 약화된 급진성, 성평등 '신화' 등의 담론으로 대학 여성운동을 둘러싼 기회구조가 바뀌게 되고, 대학 공동체 붕괴와 역차별 담론의 확산 속에 대학 여성운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다시' 활발히 전개되면서 대학 여성운동은 학생 사회를 젠더 구조 변혁의 주체로 불러내고 있으며, 총여학생회의 폐지와 같은 위기를 운동의 확장 and 다양화의 기회로 전환해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현재 대학 여성운동의 지형을 단순히 생물학적 남녀 간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단순화하여 이해해서는 안 되며, 한국사회의 변화와 긴 투쟁의 역사 속에서 읽어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 제 어

대학 여성운동, 여학생운동, 페미니즘, 총여학생회, 한국 여성운동

* 제1저자: 정다울, 교신저자: 이나영

* 이 논문은 2017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익한 심사평을 제공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수료(daul0221@daum.net)

2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nylee@cau.ac.kr)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대학가는 총여학생회 ‘폐지론’으로 뜨겁게 달궜었다. 특히 연세대, 성균관대, 동국대 등에서는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총여학생회 존폐에 관한 학생총투표를 실시하였고, 찬반을 둘러싼 학내외 논쟁이 극심했지만(시사IN, 2018/7/3; 중앙일보, 2018/11/22), 결과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얻어 총여학생회가 폐지되었다. 이로써 한때 대학 여성운동의 거점이었던 총여학생회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상당수의 관련 언론 보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대학 내 페미니스트 주체들이 ‘새롭게’ 등장했으며 이에 대한 남학생들의 반발(‘백래시’)이 심화된 결과로 이해해 소위 ‘젠더 갈등론’으로 포장했다(조선일보, 2018/6/9; 한국일보, 2018/11/23). 사회문화적 성차별 현상의 심층구조에 대한 설명이 탈각된 채 부상한 ‘젠더 갈등’ 프레임은 소위 ‘20대 남자’ 현상과 접속하며 정당성을 확장해 갔다. 20대 남성이 안티 페미니즘 정서와 왜곡된 공정성 개념으로 무장하였으며 이들의 세력화가 가시화되는 대표적 예시가 바로 총여학생회 폐지 흐름이라는 것이다(중앙일보, 2019/1/19; 한겨레, 2019/1/12; KBS, 2018/12/5).

그렇다면 대학은 ‘남녀 간의 갈등이 없던 평화롭던 옛 시절’과 작별하며, 소위 ‘영영 페미니스트’들과 20대 남성들이 격렬히 반목하는 전장이 ‘비

로소' 되었는가?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backlash)'와 '리부트(reboot)' 현상이 상호구성적이라면 오늘날 대학 내 '유별난' '소란'은 기실 이미 한국 사회에 배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무엇보다 특수(특정 세대와 대학)와 보편(남성과 여성) 간 작위적 연결 프레이밍을 통해 왜곡되고 소개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글은 총여학생회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20대 남성의 특수 문제'라는 납작한 세대론으로 환원되는 경향과, 민주화 운동·총여학생회 운동·반성 폭력 운동 등 1980년대부터 축적되어온 한국 대학 여성운동의 역사적 궤적을 탈각시킨 '새로운' 페미니스트 '주체 탄생론'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대학생 운동의 역사에 관한 기존 연구와 논의들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동 속에서 이를 맥락화했다(장준오, 1995; 이창언, 2013; 안정희, 2010). 대표적으로 정근식(2013)은 학생운동의 역사적 맥락화를 주문한다. 구체적인 의제 설정과 운동의 전개 방식은 장소성 및 시간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므로, 한국 사회의 변동과 연결시킬 때 비로소 운동의 의미와 방향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이다(정근식, 2013: 31-34). 그러나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최승원, 2009), 대부분의 연구에서 성별 차이는 삭제되어 있으며, '학생운동' 연구는 '여학생운동'에 대한 관심을 결여한 채 진행되어 왔다.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기존 연구의 몰성성을 비판하면서 '학생운동'이라는 하나의 운동으로 통합되어 설명될 수 없는 대학 여성운동을 연구해왔다. 이들은 '학생운동'의 남성중심성을 비판하고, 대학 내 여성들을 (대학) 사회 변혁의 주체로 호명하면서(허나윤, 2000; 권인숙, 2005), 참여 경험을 통해 재/구성되는 집단 정체성 혹은 실천, 전략 등 행위자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이다혜, 2012; 한종태, 2014; 전희경, 2001; 원혜빈, 2019; 김보명, 2008; 임봉, 2019). 기존 연구들은 대학 여성운동과 대학 사회의 변화 간 상호관계성을 맥락화하면서 여성운동 혹은 여성주의 운동이 놓이는 특수한 상황이 있음을 밝혀냈는데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상당수의 연구들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대 중반 이후 등 특정 시기에 초점을 맞추거나(김보명, 2008; 원혜빈, 2019; 이다혜, 2012; 전희경, 2001; 홍성수, 2011; 한종태, 2014), 한 대학의 사례에만 집중하는(임봉, 2019; 김미현, 2020) 경향이 있다.

이 글은 선행연구들의 성취를 참조하면서도 분절적 기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유동하는 대학 여성운동의 역사를 전체사적 맥락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학 여성운동은 어떠한 상황에서 등장했고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변곡점이 된 사건들과 쟁점들은 무엇인가? 기점마다 대학 여성운동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길을 만들어 왔을까? ‘대학 여성운동’은 그 형태와 내용의 변화에 따라 이를 지칭하는 용어도 변화해왔는데(이다혜, 2012),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 운동’이나 ‘대학 페미니스트 운동’, ‘대학 여성주의 운동’ 대신 ‘대학 여성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다 다양한 시기를 포괄하고자 한다. 이때 ‘여성운동(women’s movement)’은 여성을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역할과 삶에 부여된 한계에 도전하게끔 동기부여하며, 여성들 간의 네트워크를 창조하는 활동을 의미한다(Ferree and Mueller, 2004: 577). 그러므로 여성운동은 페미니스트 운동을 포함하는 더 큰 범주로 볼 수 있으며, 시공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형성되는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의 관계를 포착 가능하게 한다(Ferree and Mueller, 2004: 580). 구체적으로 각 시기별 운동의 의제들과 실천 방식이 어떻게 당대 정치사회적 맥락과 조응해 왔는지를 대학 여성운동 단체들의 정기 간행물 및 자료집, 입장문·성명서, 학내 신문 기사 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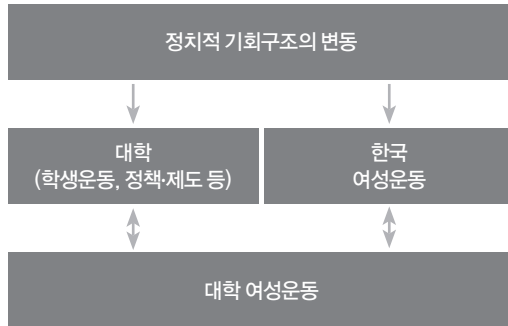
2. 분석틀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대학 여성운동의 역사적 좌표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정치사회적 변동과 조응하면서 변화하는 대학

여성운동의 전개 과정을 탐구한다. 먼저,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에 주목하여 대학 여성운동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 정치적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정치적 기회구조는 사회운동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정치 환경을 의미하며(김정희, 2011: 32), 사회운동의 전략과 영향력은 정치적 기회구조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Kitschelt, 1986). 이때 기회(opportunity)는 “동원 집단 외부의 변수들에 따라 변화하며, 기회(chances)와 위험(risks)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집단 행위의 선택가능성들(options)”을 의미한다(Koopmans, 1999: 97). 이 개념은 사회운동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운동 내적 요소들 외에도 거시적인 정치 구조에 주목하게 하며, 다양한 운동의 형성 및 발전을 분석하는 데에 사용되어 왔다. 이때 정치는 주로 국가 및 정부로 대표되는 ‘공적’ 체계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대학 여성운동은 ‘대학’이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여성운동’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인다는 특징이 있다. 대학 여성운동은 국가 및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 기회구조의 직접적 영향 아래 놓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기회구조가 (1) 대학생 운동·대학 사회와 (2) 여성 운동·정책 양자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굴절되어 대학 여성운동에 특수한 위험과 기회를 가져오기도 한다(〈그림1〉 참고).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학 여성운동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치적 기회구조가 대학 사회의 변화, 한국 여성운동의 성취 및 한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일차적으로 살펴보고, 그 영향력이 다시 한 번 대학 여성운동에 어떤 기회와 위험을 가져왔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는 현재 대학 여성운동이 놓인 ‘갈등’ 지형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추적하는 데에 필수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그림 1〉



분석을 위해 (1) 대학 여성운동 관련 정기간행물 및 자료집, (2) 대학 여성운동 단체의 입장문·성명서, (3) 학내 신문 기사를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에 걸쳐 1차 자료로 수집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아카이브’, ‘국회전자도서관’,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의 대학 자체 아카이브를 활용하였으며, “대학 여성운동”에 한정하지 않고 “여학생 운동”, “총여학생회”, “대학 여성주의” 등을 검색어에 포함시켰다. 한 가지 밝혀둘 점은 본 연구의 분석 시기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40년에 걸치기 때문에 각 시기마다 주된 자료의 특성이 달랐고 그 결과 수집 방식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자료는 상대적으로 위 아카이브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비교적 기록이 남아있는 총 16개 학교의 학내 신문 기사를 수집하였으며, 대학 여성운동 단체 홈페이지 및 SNS 계정을 통해 성명서, 입장문, 자료집 등을 수집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① 1980년대 초반~1987년, ② 1987년~2000년대 초반, ③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④ 2010년대 중반~현재로 분석 시기를 나누어 대학 여성운동의 변화와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이다혜, 2012; 한종태, 2014; 김미현, 2020; 김보명, 2008; 전

희경, 2001)는 1980년대 초·중반과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을 분기점으로 대학 여성운동의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1980년대 초·중반 민주화 운동의 열기 안에서 총여학생회를 비롯한 여학생 조직이 세워졌고, 1990년대 중반에는 대학가에서 여성주의자 집단이 새롭게 등장하며 활발한 운동을 전개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학 여성운동이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대두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시기를 구분하되, 대학 사회와 한국 여성운동의 변화를 동시에 살피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여성운동이 당대 특수한 시대적 배경과 여성운동(Women's Movement)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목표와 내용을 가지고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현재의 대학 여성운동이 과거의 운동과 시공간을 가로질러 긴밀하게 얹혀 있음을 밝힐 것이다.

II. 1980년대 초반~1987년: 사회 변혁과 여성 ‘문제’의 독자성 사이에서

주지하듯, 박정희 군사정권의 갑작스러운 몰락과 신군부 정권의 탄생,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진 1980년대 초반은 민주 세력에 대한 폭압적 군사정권의 탄압으로 얼룩졌다. 한국의 진보적 여성운동³은 1970년대 여성

3 진보적 여성운동의 정체성으로 출발한 여성단체들은 현재 여성운동의 주류로서 성장해왔으며, 여성정책의 형성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여성운동과 여성정책형성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활동과 변화를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 논문은 ‘여성단체협의회’로 대표되는 여성단체활동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포함한다.

노동자 운동, 〈크리스찬 아카데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맥을 이어온 반독재투쟁과 사회변혁운동의 토대 위에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들은 정부의 후원을 받는 이익 단체들을 ‘보수’라 칭하고 스스로를 ‘진보’라 정체화하며, 전체사회의 변혁을 통한 여성해방을 기치로 〈여성평우회〉 등 여성운동 단체들을 출범시키기 시작했다.

〈여성평우회〉는 1983년 6월 18일, ‘여성의 평등, 발전, 평화’를 목표 이념으로 삼고 “남녀를 차별하는 성차별 문화개혁”, “남녀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건설”, ‘민족 분단의 극복 및 평화로운 통일사회 이룩’ 등을 활동지침으로 삼고 창립되었다(여성평우회, 1983/6/18, 1984/6/18). 여성문제를 사회·정치적인 문제와 결합해 운동의 목표와 실천 지침을 제시했기에 일제 강점기 〈근우회〉⁴ 이후 최초의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라 평가받는다.⁵ 〈여성평우회〉는 당시 이중삼중의 억압상태에 놓인 여성들의 상황에 주목해 조기정년제 철폐운동, 결혼퇴직제 반대운동 등을 펴며 변혁적 여성운동을 전개했으나, 개량주의 논쟁에 휘말려 1987년 해산된다. 그러나 한국 최초로 가족 내 여성폭력 문제를 의제화하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 도입과 쉼터를 개설한 〈한국여성의전화〉(1983), 교회개혁과 사회개혁을 위해 일하고자 한 〈기독교민회〉(1986)의 창립 등 독자적 여성단체 성립의 도화선이 되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기독교민회〉는 이후 설립된 〈한국여성민우회〉(1987), 〈한국여성단체연합〉(1987), 〈한국여성노동자회〉(1987) 등과 함께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 대학 여성운동은 반독재 투쟁과 사회변혁에 대한 당대 진보 여성들의 열망과 조응하며 태동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폭발적 동력 속에 역량을 쌓아가던 대학 내 여성들은 1984년부터 총여학생회라는 독자적인 조

4 〈근우회(權友會)〉는 1927년 조선의 여성운동가들이 좌우 이념을 넘어 설립한 전국조직의 여성단체다.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한국의 진보적 여성운동과 여성평우회,” <https://www.kdemo.or.kr/blog/dictation/post/617> (검색일: 2020. 5. 5).

직을 구성하며 한국/대학 사회의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장을 본격적으로 형성하기 시작했다. 1984년 서울대와 고려대를 필두로 1985년 성균관대와 동국대, 건국대, 중앙대, 한양대, 전남대, 1988년 연세대, 1989년 부산대 총여학생회가 성립되는 등 30여개 대학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작용했다. 우선, 1970년대부터 축적된 ‘여성의식’의 고조다. 대학 내 여성들은 1970년대 유신정권 하에서도 여학생부, 비밀학습서클 등을 중심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해 왔으며, 1977년 아시아 최초로 이화여자대학교에 개설된 ‘여성학’ 강좌 등 교양강좌를 통해 체계적으로 페미니즘을 학습해 왔다. 1984년 한국여성학회 창립은 학문으로서 페미니즘에 대한 여학생들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둘째, 성장하는 ‘여성의식’과 더불어 주류 학생/민주화 운동의 남성중심적 문화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성장하면서 독자적인 여학생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의 학생운동은 주로 언더서클(이른바 ‘UC’)이라 불리는 비공식적인 학생 조직 혹은 비/공식적인 학회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는 가부장적 분위기와 남성중심성으로 인해 여성 배제적·차별적 공간이었다. 여학생들은 ‘운동권’ 남학생들을 뒷바라지하는 보조적 존재로 취급되거나 조직의 주변부에 머무르기 일쑤였다(곽복희, 1995; 권인숙, 2005; 전수영·윤성화·서병수·이선주·박정재, 1993). 한국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문화는 운동권 조직 내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여학생들은 활동가 양성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소수자’의 위치에 머물러야 했다. 학생운동 진영 내 고착화된 성별화된 역할 분담과 성별 위계구조로 인해 중요한 일은 남성이, 부차적인 일은 여성이 맡는 관습이 만연했는데, 예컨대, 남학생은 대자보의 내용을 만들고 여학생에게는 내용을 받아 글씨를 쓰는 등의 역할이 주어졌다고 한다(김혜숙·조순경, 1995: 143-144). 성차별적인 문화는 학생운동권 내의 여성들이 온전한 활동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운동권 안의 ‘여성’으로 남아있게 하는데도 작동했다. 당시 학생운동에서 “수없는 좌절과 모멸을 겪어야 했던” 여학생들이

여성 언더써클뿐 아니라 여학생학회 등 독자적 조직을 만들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 “가장 진보적이라는 학생운동권에서 가장 후진적인 남녀차별 행태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필연적인 일”이었던 것이다(곽복희, 1995: 20).

셋째, 전두환 정권의 유화정책으로 변화한 정치적 기회구조와 학생회 조직의 재건이다. 5·17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혈 진압 등 정통성 없는 정권 창출 과정에 대해 재야인사들의 비판과 저항이 이어지자 전두환 정권은 이를 잠재우고자 1983년 2월부터 ‘국민화합조치’라는 미명하에 단계적으로 유화정책을 펴기 시작한다.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를 순차적으로 해제시켰으며, 해직 대학 교수 타대학 복직 허용, 수감 대학생 석방, 재적 대학생 복학 허용 등 소위 ‘학원자율화 조치’(1983년 12월 21일 발표)가 시행된다. 여기에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전두환 정권의 절박한 노림수가 있었지만(최한·김지영, 2007: 265), 더 근본적인 이유는 강경 일변도의 대책으로는 더 이상 학내 민주화 투쟁을 제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상황인식 때문이었다(안정희, 2010: 6). 1984년이 되자 대학생들은 학원민주화 운동에 주력하며 핵심 사항으로 강제 징집 철폐를 내거는 한편, 학도호국단 철폐를 요구하며 보다 자율적인 학생대표기구인 총학생회의 부활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 당국 및 정부와의 마찰 역시 심각했지만, 결국 정부는 1985년 1월 24일 학도호국단을 폐지하고 총학생회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손인수, 1999: 485; 안정희, 2010: 10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1985년부터 전국적으로 총학생회 선거가 시행되었다(김민석, 1992: 257).

이 가운데 총학생회의 부활과 함께 총여학생회가 출범하기 시작한다(원혜빈, 2019: 28). 물론 학원자율화 조치는 학생운동을 제도 내적으로 포획하여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다 개방적인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학생운동의 확장에 기여했으며(이창언, 2013: 227) 대학 여성운동이 성립되는 조건을 마련했다. “여학생 문제”와 “사회 내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추진할” “강력하고 체계적인” “자치 조직”의 출범을 알린 서울대 여학생회는 “과거에 대한 냉철한 비판”을 전제로 “반파쇼민주운동의 선봉”으로서 여학생회가 나갈 것을 주문한다(서울대학교 총여학생회 홍보부, 1984/10/8).

독재타도와 민주화라는 거대한 과제 속에 초기 대학 여성운동은 ‘독자성’을 강조했다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학생운동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 변혁을 통한 여성해방’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반파쇼 민주화 과정을 통한 여성문제의 해결”(서울대학교 총여학생회 홍보부, 1984/10/8)은 결국 “여학생 문제가 단지 여학생들 자신만의 문제로 국한”되어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운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과 결을 같이 한 것이었다(서울대학교 학도호국단 총여학생부, 1984/3/14). 1984년 서울대학교 학도호국단 총여학생부가 천명했듯, 대학 여성운동의 방향은 “보편적 문제해결”을 위한 학내의 움직임에 “공동적 보조”를 해나가면서 특수한 여성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으로 애초에 설정되었다.

2. 총 여학생부의 입장

여학생 문제가 단지 여학생들 자신만의 문제로 국한될 경우 해결을 위한 방법모색은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현재, 학내의 보편적 문제해결을 위해 결성되어 가고 있는 학원 자율화 추진 위원회의 움직임에 공동적 보조를 해 나가면서 그 보편적 해결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여학생 문제를 여학생이 주체가 되어 독자적 해결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대학교 학도호국단 총여학생부, 1984/3/14)

개인이나 제도가 아니라 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통해 여성 해방을 이루려는 목표는 당대 대학 여성운동의 복합적인 성격을 구성했다. 대학 여성들은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주체적 여성 정립’과 ‘성차별 구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지만 서구와 달리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분단 냉전

체제와 군사독재 체제가 배태한 한국 사회의 중층적 모순이 여성 억압구조와 얽혀 있다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각 학교의 총여학생회가 생산한 자료집, 간행물 등은 성의 억압만이 독자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여성문제의 복합적 시각을 보여준다. 이들은 여성억압의 뿌리가 민족 억압, 계급 억압과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고 보았으며, 여성을 “삼중 모순 구조 속에 가장 첨예한 피억압 계층”이자 문제 해결-‘인간 해방’-의 ‘주체’로 보았다(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1985).

우리의 실천 방향성은 인간을 억압하고 제약하는 모든 요소를 척결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제반의 구조적 모순을 ____하여 ____인간 해방을 향하여 대학인으로서 ____적인 탐구와 실천을 해 나갈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 자유와 평등을 위한 민주화와 민족분단의 극복에 차명하는 민족적 주체로서 통일 민족국가로의 발전에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에 민족, 계급, 성의 억압이라는 삼중 모순 구조 속에 가장 첨예한 피억압 계층을 구성한 이 땅의 여성은 모든 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그 실체마저 볼 수 없는 역사상 가장 뿌리 깊은 문제에 대한 대담한 대항을 하려한다.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1985)⁶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상당수의 대학 여성들은 서구의 여성해방이론으로 완전히 설명될 수 없는 한국 여성의 ‘특수한’ 조건에 주목하고 한국의 정치사회적 현실 속에 여성문제를 위치 지을 것을 강조했다. “서구여성들과 한국 여성은 서로 다른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여성문제는 “제3세계 여성들이 겪는 극심한 사회모순” 속에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조선대학교 총여학생회, 1986).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노동자 문제 뿐 아니라 미군 기지촌 여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웠는지 모른다.

⁶ 출처: 동국대학교 제31대 총여학생회 ‘무빙’ 페이스북 페이지 (인용문 상의 빈 칸은 원본이 오래되어 손실된 부분임.)

이들에게 노동자 여성문제는 저임금에 기초한 수출 경제라는 한국 경제의 특수성과 가부장제가 교차한 결과였다.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되면서 가사 노동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되는 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은(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사회여성연구회, 1985/6/4) 한국 사회의 모순과 만나 더 심각한 조건을 형성한다. 미군 기지촌 여성 문제는 “주변 강대국에 의한 한반도의 분단, 냉전 고착화의 결과”가 “한반도 여성을 유린하는 직접적 성침탈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되었고, 기생 관광 문제 역시 유사하게 “정권과 제국주의의 의도가 맞아 떨어지는 곳에서” 한국 여성들이 “민족적인 수치감과 성적인 모독을 감수”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서울대학교 총여학생회 문화부, 1985/5/16). 199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결성 시 이화여대 민주동맹회와 여학생 조직이 결합한 것도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다. 요컨대, 당시 대학 여성운동의 주요 작인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자본주의, 민족 분단과 독재정권과 같은 한국 사회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구조적 모순들이 남성과 다른 형태의 여성 억압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던 것이다.

구조적 모순과 사회변혁에 대한 강조는 때로 여성문제를 독재 타도, 민주화 등 ‘보편적 문제’의 하위 문제로 인식하게끔 했다. 대표적으로 1984년 경찰의 여대생 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에서 이러한 성격이 잘 드러난다. 당시 경찰에 의한 여대생 성추행이 공론화된 직접적인 계기는 11월 3일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학생의 날 부활 기념연합행사에 참여한 여학생들이 서대문 경찰서, 청량리 경찰서 등으로 연행되었다가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었다. 그 이전부터 반복돼왔던 경찰의 여대생 성추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총 10여개 대학의 여학생 대표기구들은 ‘여학생연합 여학생추행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984년 11월 16일 ‘폭력경찰의 여대생 및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적 탄압 사례’를 보고했다.

이 날 발표된 사례 보고서(아래 인용문)를 살펴보면, 여학생연합 진상조사

위원회는 여학생 추행사건이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자 “성적 탄압”임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문제는 “단지 불행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여학생 전 학우에 대한 인권 탄압”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적 폭력과 탄압의 주체는 남성 권력이 아니라 국가 권력으로 표현되었다. 이들은 경찰에 의한 여학생 추행 사건의 본질을 “사회민주화 운동의 햇불인 학원에 대한 탄압의 일면”이자 “현정권의 도덕적 파탄을 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전두환 정권이 전개하는 유화 조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투쟁의 과제 역시 “학원에 대한 탄압에 과감하게 도전하며 정권의 야비한 탄압음모를 철저히 분쇄”하는 일로 설정되었다. 공권력이 개입된 여성 폭력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이라는 성격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젠더폭력’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그러나 군사독재의 폭압적인 정치에 의해 기본적인 인권조차 확보되기 어려웠던 1980년대의 사회운동 공간에서, ‘국가폭력’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상징 투쟁의 중심에 놓인 문제였다(신상숙, 2007: 231-232).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학생연합 진상조사위원회는 ‘젠더폭력’의 맥락보다는 ‘국가폭력’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여성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당대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이 직면한 정치적 민주화라는 과제 속에서 그 일면으로 여성문제를 해석한 것이다.

정권의 경찰폭력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성적 폭력으로 화하고 있다. (중략) 즉 일반적으로 볼 때 3세계 정권에서 사회운동세력 탄압을 위해 여성운동가에게 강간이 고문으로 행해졌듯이 현금의 여학생 추행사건도 사회민주화 운동의 햇불인 학원에 대한 탄압의 일면임을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고 이는 동시에 현정권의 도덕적 파탄을 선고하는 것이자 파쇼 우민화정책인 여성의 성적대상물화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가 단지 불행한 개인의 문제로 취급해 버릴 수 없는 저들의 전면적 성적 탄압으로써 점차 전 여학생 전 학우에 대한 인권 탄압을 가져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전여학생의 이름으로

민주화의 햇불인 학원에 대한 탄압에 과감하게 도전하며 정권의 야비한 탄압음모를 철저히 분쇄하고 이 땅의 진정한 인권수호를 위해 단결된 힘으로 싸워 나가야할 것이다. (여학생연합 여학생추행사건 진상조사위원회, 1984/11/16)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공권력에 의한 민중탄압’이라고 보는 경향은 1986년 ‘부천시 성고문 사건’⁷에 대한 대응에서도 재현되었다. 부천시 성고문 사건은 피해자의 폭로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으며,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여성운동계, 종교계, 재야 민주세력, 야당 등이 연대하는 장이 마련되었다(김인혜, 2017: 28-30). 대학가에서는 9개 대학 여학생회가 연합하여 ‘민중 운동 탄압 분쇄 및 폭력 성고문 살인 정권 처단을 위한 여학생 공동투쟁위원회’(이하 ‘여학생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1986년 7월 10일 고려대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여학생 공동투쟁위원회가 발표한 투쟁선언문에서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성고문이 “여성을 이중으로 억압하여 성을 도구화”하는 “여성 억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으나, 억압의 주체는 “폭력 성고문 살인 정권”으로 표현되었고, 따라서 성고문 사건의 본질은 “민중운동 탄압”으로 정의되었다. 투쟁의 방향 역시 “살인정권 처단하자”, “폭력경찰 때려잡자” 등으로 수렴하였으며, “여성 억압 종식”을 위한 전제도 “민주헌법 쟁취”로 설정되었다(여학생 공동투쟁위원회, 1986/7/2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 대학 여성운동은 폭압적 군사 정권과 민주화 운동의 열기, 학생운동 및 여성운동의 활성화라는 배경 속에서 전개되었다. 이 가운데 유화정책이라는 정치적 기회구조는 대학 여성운동에 이중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먼저, 사회운동의 기회가 확장되면서 대학 내에 운동조직을 결성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또한 학교 밖에서는 여성운동 단체

7 1986년 6월, 위장취업 혐의로 한 여성 노동운동가가 부천 경찰서에 연행되었고, 조사를 담당한 문귀동 경장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고문하였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인천 교도소로 송치된 후 자신이 겪은 피해사실을 폭로하였고, 이를 통해 ‘부천시 성고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여학생들은 여성의 문제를 여성 조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 사회의 모든 관심이 민주화 및 독재 타도에 집중되고 군사정권의 폭력적 대응이 전개되자 독자적인 의제와 독립적 운동을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는 여성들의 주장이 무시될 수 있다는 두려움, 전체 운동에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여성운동 자체가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무력감 등도 반영되어 있었다(김혜숙·조순경, 1995: 14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대학 여성운동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제화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자본·반독재 운동에서 여성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노동자 문제, 여성 빈곤문제, 기지촌 문제, 위안부 문제 등 민중여성의 현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러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대학 여성운동은 독자적 여성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한국 사회에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여학생들은 ‘한국 여성이 처한 현실은 무엇인가?’, ‘여성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등을 고민하며 당대 한국 사회의 모순적 조건 속에 ‘여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속적으로 질문했다. 여성운동이 전체 운동 속의 부분운동으로, 여성문제가 보편적 문제와 별개인 특수한 문제로 자리매김되는 국면 가운데, 이들은 ‘운동권’ 중심부의 작위적이고 권위적인 동원과 배제 전략에 비판적 문제의식을 축적해 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남성중심의 ‘운동권’ 문화에서 설정된 ‘사회변혁’의 과제에서 무엇이 진정한 ‘사회변혁’인지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Ⅲ. 1987년~2000년대 초반: 성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1987년 민주항쟁과 형식적 민주주의의 달성, 1989년~1990년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급작스럽게 도래한 탈냉전 질서는 운동지형 전반의 변화를 추동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시민사회영역의 확대와 동시에 여성운동단체의 수적 증가를 결과하였다. ‘주류 운동권’ 내에서 여성운동을 여전히 민족민주운동의 부문운동으로 여기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지만, 여성 의식의 고양과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약화된 운동 세력 등으로 인해 여성운동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고조되어 갔다. 진보여성단체들은 점차 성폭력, 가정폭력, 고용상의 차별 문제 등을 의제화하면서 여성운동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장해가기 시작한다(강남식, 2004).

전술했듯, 1987년을 기점으로 설립된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진보적 여성운동 단체들은 1980년대 후반에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을 전개해나갔으나, 1989년경에 이르면 여성운동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을 본격화했다. 〈여연〉은 “함께 그리고 따로”라는 조직 원칙을 가지고 군부독재 종식과 통일사회 건설을 위해 사업을 “함께” 하되, 여성운동 조직을 “따로” 만들어 여성해방적 시각으로 여성대중과 함께 가부장제 타파와 자본주의, 군부독재에 대응하고자 했다(지은희, 2003: 103). 그럼에도 1987년 민주화 이전 한국여성운동은 명백히 스스로 민족민주운동의 하위범주로 규정하고 민족민주운동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단일 대오’를 유지해야만 했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운동 내 여성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일이었지만, 문제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이 같은 경향이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1989년 1월 구성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 〈여연〉이 가입하자

내적 긴장은 본격적으로 외연화되기 시작한다. 전민련 가입에 반발한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또하나의문화〉 등이 〈여연〉을 탈퇴한 것이다(지은희, 2003: 108). 갈등적 상황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여연〉은 1991년에 운동의 주체와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를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조주현(1996)은 진보적 여성운동이 진보적 사회운동과의 통일성 문제 및 연대 수준을 놓고 고민하면서 1990년대를 맞이했다고 진단한 바 있다(조주현, 1996: 150). 운동 주체의 확대, 연대 방식, 운동 내용과 방향의 전환은 이후 정치적 입장이 다양한 여러 여성운동 단체들이 사안에 따라 ‘여성’의 이름으로 연대하는 방향으로 수렴하였다(조주현, 1996: 154). 이러한 전환은 1990년 11월 16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정신대연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7개 여성운동 단체들과 다양한 시민, 종교, 학생 단체들이 참여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결성과 성폭력을 중심으로 여성인권 문제를 독자적으로 다루고자 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결성(1991)을 가져왔다.

이후 1993년 민간 정부의 수립을 계기로 한국 여성운동은 국가와의 ‘갈등적 협력’ 관계 속에서 전개되었고(신상숙, 2008), 독자적 문제로서 여성인권 에 대한 관심과 관련 법제화 운동으로 무게 중심축이 이동하게 된다. 무엇보다 1980년대에는 민주화나 노동운동 탄압 등과 연계된 것으로 비춰지던 성폭력 문제를 ‘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으로, ‘혁명’에서 부차적으로 여겨지던 여성문제를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지속시키는 가부장제의 문제’로 분명히 하기 시작했다(강남식, 2004: 18). 이로 인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에 관한 법제화 운동이 가열차게 전개되었고, 마침내 성폭력특별법(1994), 여성발전기본법(1995), 가정폭력방지법(1997),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1999) 등이 제정되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1999). 대학 여성운동 역시 한국 여성운동의 변화와 조응하면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독자적 움직임을 모색했다. 특히 성폭력의 현실에 대한 관심, 이론과 실천에 대한 고민은 1990년대 대학 여성운동

의 주요한 자양분이 된다.

실제 1990년대에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 사회적으로도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⁸ 1991년 1월,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를 살해한 일명 ‘김부남 사건,’ 1991년 8월, 전 세계를 뒤흔든 김학순의 일본군 성노예제 고발, 1992년 1월, 계부에 의한 지속적인 성폭력의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계부를 살해한 일명 ‘김보은·김진관 사건,’ 1992년 10월, 미군에 의해 기지촌 여성이 처참하게 살해당한 ‘윤금이씨 살해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한다. 대학가에서도 ‘서울대학교 조교 성희롱 사건’(1993), ‘이화여자대학교 대동제 고대생 난동사건’(1996), ‘연세대학교 한총련 여학우 성추행 사건’(1996) 등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성폭력 사건들⁹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성폭력이 중요한 학내 문제로 부상했다.

성폭력 사건들의 공론화 과정에서 대학 여성운동 단체들은 대학 밖의 여성단체들과 연대의 경험을 쌓아갔다. 예컨대, ‘김보은·김진관 사건’에서는 6개 대학의 총여학생회와 여학생회건설준비위원회가 연합하여 ‘구명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대책위가 구성되었고, 이들은 ‘김보은·김진관 사건 공동대책위’에 참여하여 서명운동, 기금 마련 등을 통해 여성단체들과 공동대응을 해나갔다(김보은·김진관 사건 공동대책위, 1992). 또한, ‘연세대학교 한총련 여학우 성추행 사건’에서는 〈여연〉을 비롯한 여성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이 진압경찰과 현장진압책임자, 총책임자(경찰청장) 등을 고소하였

8 각각의 사건명은 사건이 공론화된 당시 명명된 방식을 따라 표기하였다.

9 서울대학교 조교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의 대자보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후 대법원 판결로까지 이어지는 민사소송을 통해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을 최초로 법정으로 이끌어냈다. 이 사건을 통해 반성폭력학칙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동제 고대생 난동사건은 고려대 학생들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화여대 대동제에 난입한 사건이다. 1996년, 이화여대 학생들은 고려대 학생들의 폭력적 행위와 난동을 여성문화에 대한 남성적 폭력이라 해석하고 이를 ‘성폭력’이라 명명함으로써 성폭력의 의미를 확장하였다. 연세대학교 한총련 여학우 성추행 사건은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범민련 대회에 참여한 여학생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진정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 성폭력 사건이다(김보명, 2008: 199-202).

고, 서울대·서울산업대·한양대·동국대·연세대 등에서는 학생들의 주도 하에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서명운동을 계기로 각 대학의 총여학생회와 여학생위원회 등이 참여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가 결성되었고, 이들은 1997년 3월 31일 해당 사건과 관계된 여성단체, 인권단체, 변호사 등을 초청하여 서울대학교에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대책위는 이후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이하 ‘여성연대회의’)로 발전하여 반성폭력학칙 제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대학 여성운동은 이제 기존의 학생운동이 ‘사소’하거나 ‘정치적’이지 않은 일로 여겨왔던 여성문제들을 공론화·가시화하면서 해결책을 독자적으로 모색해나갔고 대학 안팎의 여성운동 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갔던 것이다. 쌓여가는 연대의 경험과 여성인권 의식의 제고는 1990년대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의 주요 자원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운동이 맞았던 위기 상황과도 연관된다. 1987년 민주화투쟁과 1990년 사회주의 몰락 이후 대중동원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여학생들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과거와는 다른 운동을 경험하거나 실험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던 것이다(전희경, 2001: 73). 학생운동 진영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를 결성하는 등 운동의 규모와 조직면에서 성장했지만, 차츰 일반 학생이나 시민들로부터 고립되어갔다. 특히 1996년 연세대 사태는 과격한 학생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이후 대법원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 대중적인 학생운동조직의 활동력은 점차 위축되었다(정근식, 2013: 42). ‘전투적인’ 학생운동이 힘을 잃게 되자 역설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고, 가두시위 등의 방식이 아니라 실험적이고 문화적인 방식의 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전개된 대학 여성운동의 내용적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성문제’의 보편성과 ‘여성 관점’의 중요성이 강조되

었다. 예컨대, 서울대학교 여성문제 연구동아리 협의회(1993)는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입장문에서, 성폭력은 개인이 겪는 특수한 사건이거나 특정 가해자/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 수준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공통으로 겪는 경험이며, “여성을 통제하고 불평등한 상태로 묶어” 두는 구조에서 기인함을 직시했다. 다른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이 뿌리 깊은 문제는 ‘성의 억압’을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조교제도의 문제점과 성추행 문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를 여성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중략) 우리들의 침묵이나 무관심 혹은 잘못된 편견은 결과적으로 ‘성폭력의 악순환’을 통해 여성을 통제하고 불평등한 상태로 묶어놓는 것을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다. 우리는 ○조교와 앞선 피해자들, 그리고 수많은 성폭력의 피해자들-김보은, 김진관, 김부남, 윤금이로부터 당신의 무심한 음담패설에 남모를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르는 당신의 같은 과 여학생에 이르기까지!-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서울대학교 여성문제 연구동아리 협의회, 1993)

둘째, 그러므로 당시 대학 여성운동은, 서구의 제2물결 페미니즘 운동에서 1970년대 초반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그랬듯, 개인적이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던 여성문제를 정치화하면서 성적 억압과 이를 가능케 하는 성별 권력구조에 저항했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위계적 성별분리 구조가 어떻게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성별화된 섹슈얼리티를 고착화하는지 직시하면서 성관계에 내재한 폭력적 요소를 드러내고자 했다. ‘정치가 지배와 종속에 대한 것이라면 성 관계(sex relationship) 또한 정치의 영역’이라던 미국 페미니스트 케이트 밀레트(Millett, 1970)의 통렬한 지적이 한국에서 공명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1996년 8월 ‘연세대학교 한총련 여학우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10월에 서울대, 서울교대, 한양대에서는 “너희가 X를 믿느냐?”라는

제목의 문화제¹⁰가 열렸는데, 여기서 대학 여성운동가들은 이 사건을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성에 대한 통념을 폭로하고자 했다. 남성을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주체로, 여성을 “수동적”이고 “정숙한” 대상으로 규정하는 이중 잣대 하에서 성은 언제나 남성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성문화 자체가 이미 강간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연대회의 역시 여성에게 성이 “아주 사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성폭력 역시 “개인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치부될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것으로 사고될 수 없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따라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 자체를 금기시하기보다 성이 구성되고, 성이 권력을 조직하는 방식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의 원인 해소: (중략) 여성은 순결을 지켜야 하고 성행위에서는 의례적인 거부를 해야 하며 최소한 수동적이기라도 해야 정숙한 여성으로 인정되는 반면, 남자에게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되므로 실제로 애인이나 부부 사이의 일반적 성관계마저 강간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즉 우리 사회의 성문화 자체가 이미 강간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진보를 위한 청년연대·들꽃모임·관악여성모임연대(주)·나란한 성 빼앗한 성·서울교대총학생회·한양대여성위원회·연세대성정치위원회 The Other, 1996/10/15)

남성의 페니스는 무기이며 이에 대하여 여성은 무방비상태이다. (중략) 여성에게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만 허용되는 것, 즉 아주 사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성에 대한 공론화는 금기시되고, 성과 관련하여 여성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여성 각자가 개인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남성중심적인 성은 그 자체로 끊임없이 신비화되었던 것이다. (여성연대회의, 1997/6/5)

10 이 문화제의 주제는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과 노출단속법에 대한 규탄문화제’였으며, 1996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진보를 위한 청년연대, 들꽃모임, 관악여성모임연대 추진위원회, 나란한 성 빼앗한 성, 서울교대 총학생회, 한양대 여성위원회, 연세대 성정치위원회가 함께 주최하였다.

셋째, 1990년대 후반이 되면서 여성인권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심은 점차 성소수자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의 성적 실천에 대한 모순적 금기와 낙인화, 성소수자 억압과 배제가 모두 이성애 가부장제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여성이 “소수자로 억압받는 성”이라면 성적 소수자를 운동에 포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1997/5/12), “배타적 이성애적 질서”에서 여성과 성소수자는 공히 타자로 범주화되고 역사에서 배제되어 왔기에 ‘우리’는 마땅히 “동지”다(관악여성모임연대·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성정치위원회, 1998/5/19). 이들은 성적 억압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방투쟁”에 상호 연대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언제나 실제 연대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운동의 방향에 있어 여성과 성소수자의 동시적 해방을 추구했으며 성적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감수성 제고, 이에 기반한 운동의 대중성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여성운동은 ‘성’으로 범주화시켜 억압을 가하는 권력구조에 대한 해방투쟁이며, 남성과 여성으로 크게 범주화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소수자’로서 억압을 받고 있는 성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에·여성에 의한·여성을 위한 투쟁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적 소수자의 운동도 여성운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1997/5/12)

우리는 오히려 타자의 거부당한 역사를 주목한다. 가부장적 남성이 주변으로 쫓아버린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수많은 할머니들과 우리 자신들, 배타적 이성애의 논리에 희생당한 동성애자들, 그리고 지배자의 시선을 갖기를 거부하는 많은 남성들... 우리는 그들을 동지라고 부른다. (관악여성모임연대·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성정치위원회, 1998/5/19)

www.kci.go.kr

넷째,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했다. 당시 진보 여성운동의 전략과 유사하게 학내 공동체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1997년을 전후해 각 대학에서 전개된 ‘반성폭력학칙 제정 운동’을 들 수 있다. 1999년 여성연대회의에서 천명한 바, 학칙 제정은 단순히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성폭력을 근절하고 새로운 성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성폭력은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대학구성원들의 참여와 동의하에”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제시되었다.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도 죄에 대한 징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공개 사과 등을 통해 “충분히 공동체 내의 구성원에 대한 사과를 담아내”고, 교육 프로그램 이수, 여성문제 관련 단체에서의 봉사활동 등이 병행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여성연대회의, 1999/4/9). 이처럼 반성폭력학칙 제정, 성폭력 상담소 설치 등의 제도에 대한 요구는 개별적 사건의 처리보다는 공동체의 문화와 인식을 변혁하는 데에 강조점을 두었다.

학내 구성원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그것을 위반했을 시에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칙이 아닌 학내 구성원 대다수의 동의에 기반하여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그러한 행위(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범죄가 됨을 알림으로서, 단순히 성폭력이라는 범죄의 처벌만이 아닌 그 공동체 내의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의 역할까지 담보할 수 있는 학칙을 사고하는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우리는 ‘학칙’이라는 틀거리를 택함으로써 모든 대학구성원들의 참여와 동의하에 공동체 내의 성폭력을 근절하고 새로운 성문화를 형성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여성연대회의, 1999/4/9)

반성폭력학칙 제정 운동은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1997년 동아대와

1998년 부산대를 시작으로 많은 학교에서¹¹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이 제정되었다. 물론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 등 위로부터의 압력도 작용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남녀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성희롱 등 남녀차별방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안)’을 만들어 각 대학에 통보했고, 2001년에는 ‘남녀차별금지법령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을 확정하여 각 대학에 시달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처리 요령에는 “각 학교(기관) 별로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계획(학칙, 내부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표준화된 사건처리 절차보다는 대학 내부의 자율적인 요구가 반영된 학칙의 제정이 가능했다(장다해·추지현·김석호: 2019, 78). 이를 계기로 2001년 이후에는 학칙 제정의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어 2001년 한 해에만 123개 대학에서 반성폭력학칙이 제정되었다(신상숙, 2004: 4).

이상에서 살펴 본 바, 1990년대 진보 여성운동의 핵심기조는 사회변혁운동을 통한 여성해방에서 점차 여성문제의 독자성 인식으로 나아갔고, 법·제도 개선 및 성의 주류화로 변화해왔다. 정부와의 관계 또한 저항과 갈등의 관계에서 협상과 협력의 관계로 바뀌었다. 대학 여성운동 또한 성(sexuality)을 중심으로 독자적 여성문제에 천착했으며 학내 준칙 기구와 제도 마련에 골몰했다. 그러나 진보 여성운동과 대학 여성운동은 1990년대 후반이 되면서 다른 갈등적 국면과 마주하게 된다.

1990년대 후반이 되자 사이버스페이스의 탄생과 개인용 PC보급의 확대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페미니즘’ 등 다른 방식의 대중적 운동이 모색되는 가운데, ‘새로운’ 성폭력 의제가 탄생했다(불법 촬영 비디오 유포물 사건인

11 1999년에 10개 대학, 2000년에 18개 대학, 2001년에 123개 대학, 2002년에 5개 대학, 2003년에 2개 대학에서 관련 규정이 제정되었다(신상숙, 2004: 4).

‘빨간 마후라 사건’(1997)¹² 등). 군가산점제 폐지(1999) 논란으로 불거진 ‘남녀 갈등’ 논란,¹³ ‘100인 위원회 사건’(2000)¹⁴으로 확장된 진보 운동권 남성 전반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반격이 이어지면서 이제 한국의 진보 여성운동과 대학 여성운동은 그 비판의 대상과 운동 방식은 물론, 운동의 장 또한 극적으로 변화시키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IV.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운동의 위축과 새로운 담론의 부재

1990년대 이후 확장된 정치적 기회구조를 활용하여 법제화 운동 등 독

-
- 12** 1997년 7월, 10대들끼리 모여 찍은 집단 성관계 동영상에 학원가를 중심으로 불법 유포된 사건이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비디오에 등장하는 여학생은 가출 직후 4명에게 강간을 당했으며 그 후로는 누가 어떤 요구를 해도 ‘별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남학생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비디오를 제작했으나 판매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10대들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이를 유포했다는 사실은 사회적 충격을 일으켰으나 이 사건은 구조적인 성폭력이라는 차원보다는 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었다(권김현영, 2015: 119-121).
- 13** 1999년 12월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했을 때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이후 진행된 남성들의 공격을 통칭해 군가산점제 논란이라 부른다. 당시 현재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가산점제도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그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로 인해 가산점제를 규정 한 법조항이 즉각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위헌 판결 이후 사이버공간에서는 여남 간의 대립구도로 첨예하게 배치되는 ‘사이버전쟁’이 시작되었다. 관련 연구는 배은경(2000)을 참고할 것.
- 14** 2000년 12월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 뽑기 100인 위원회’는 16건의 성폭력 사례를 가해자 실명 공개 형식으로 발표하면서 운동사회의 성폭력을 공론화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운동 사회 내에서 여성들이 경험해 온 수많은 배제와 차별의 경험을 드러냈고, 이후 진보진영에서는 성별 차이가 가시화되면서 ‘단일한 신념 사회’에 균열이 발생 하는 계기가 되었다(엄혜진, 2009: 32, 71).

자적인 운동을 전개하던 여성운동은 1990년대 말 이후 진보 정부의 수립으로 이전 시기와 달리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 김대중 정부(1998~2003), 노무현 정부(2003~2008) 시기에 진보 여성운동은 정치권 내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성공하며 국가페미니즘(state feminism)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국가가 수동적으로 여성운동의 요구를 받아들여 입법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여성운동의 주체들이 국가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페모크라트(femocrat)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여성운동은 정책형성 및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¹⁵ 덕분에 이 시기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성평등에 관한 법률과 정책, 제도를 마련하였다. 여성부 설립(2001), 성매매특별법 제정(2004), 호주제 폐지(2005) 등은 국가와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여성운동이 이루어낸 대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진보적이고 친여성적인 성격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가능했던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 한국 여성운동은 흔히 ‘성공을 통한 실패’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서두원, 2012). 국가와의 협력관계 속에 여성운동이 ‘제도화’되면서 자율성이 하락하고 탈급진화되는 ‘딜레마’를 야기했다는 것이다.¹⁶ 정부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활동이 늘어나면 성평등의 급진적인 아젠다들이 실현 가능한 범위 안으로 순화되고 조정될 우려가 있으며(황정미, 2017: 25), 결과적으로 여성단체 고유의 역할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제가 어

15 국가 페미니즘은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국가의 활동을 의미할 뿐 아니라(Stetson and Mazur, 1995: 1~2), 행정관이나 관료로서 페미니스트들이 고용되거나 성평등 정책을 주장하는 여성 정치인들이 출현하게 된 현상을 의미한다(Siim, 1991: 189; McBride and Mazur, 2013: 660에서 재인용). 공적 기구 안으로 페미니즘을 제도화함으로써 여성정책의 의제를 촉진하고 행정부 및 의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도 있다(황정미, 2017: 28). 페모크라트는 페미니스트(feminist)와 관료(bureaucrat)의 합성어로서, 여성학자나 여성운동가 경력을 통해 관직에 진입한 여성 공무원을 일컫는 용어에서 출발해 점차 여성을 위해 일하는 페미니스트 관료들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왔다(Franzway et al., 1989; 원시연, 2007: 192에서 재인용).

16 물론 여성운동의 제도화의 결과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는 입장이 있었으며, 당시 여성운동 내부에서도 제도화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서두원(2012), 김경희(2007, 2009) 등을 참고할 것.

롭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된 의사결정구조의 채널이 중요해지게 되면, ‘법과 제도의 틀 내에’ 적합한 언어로 사고하고 실천하게 되고, 법을 고치고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운동이 기획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도가 운동을 협소화’하게 된다. 제도의 메커니즘에 따라 ‘알아서 조율’하고, ‘스스로 온건해지게’ 되는 ‘탈정치화’의 경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윤정숙, 2004: 66-67). 이러한 변화는 ‘여성운동의 진보성과 역동성의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오장미경, 2004: 231).

국가가 여성운동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생긴 또 다른 문제는 의제 자체가 변혁적 성격을 점차 상실했다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여성정책은 점차 불균형한 젠더 관계를 시정하려는 이전의 급진성을 잃고 점차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하였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의 시정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점차 퇴색한 것이다(김경희, 2005; 유정미, 2019; 김경희·신현옥, 2004; 이재경·김경희, 2012). 여성정책의 목적이 “남녀가 성비균형을 유지하는 식의 양성평등”으로 왜곡되어 이해되면서,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는 오히려 남성에게 ‘역차별’적일 수 있으므로 양성간 수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담론이 등장했다(이재경·김경희, 2012: 13).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들이 ‘남성들의 불이익’을 고려하지 못한 ‘이기적인’ 정책으로 낙인찍힌 것이다. 정책의 목표뿐 아니라, ‘여성가족부’로 대표되는 제도적 노력들에 대한 반감 또한 증폭되어, 사회 전반의 안티페미니즘과 여성혐오 정서를 정당화하는 기표로 활용되었다(정사강·홍지아, 2019). 여성운동의 제도적 성과가 역설적으로 ‘여성상위’, ‘남성수난’이라는 여론을 낳았던 것이다(김보명, 2018: 123).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대학 여성운동은 이전처럼 급진적인 운동을 전개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 시기 대학·학생 사회가 겪은 질적인 변화 역시 대학 여성운동의 재생산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을 시발점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 더욱 본격화되었다. 대학설립 준칙주의, 입학 정원의 자율화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학 평가와 이에 따른 재정 지원을 매개로 대학에 시장 경쟁 원리가 도입된 것이다. 대학 간 경쟁이 심화되고,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학문 체계가 재편되면서, 대학은 ‘학문 공동체’로서의 기반을 크게 잃었다. 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로 인한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은 학력자본의 사회적 가치하락을 불러왔다(김덕련·이상술, 1999: 92). 이는 경제위기에 따른 취업난과 맞물려, 학교와 학과에 따라 위계화된 대학 사회 속에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다양한 자본을 획득하기 위한 스펙 쌓기에 열중하도록 만들었다(강내희, 2013). 대학은 점차 취업을 위한 준비 공간으로 변모하였고, 학생운동이나 학생 자치에 대한 관심은 저조해졌다. 학생 공동체의 ‘관계’ 그 자체가 약화되면서(배은경, 2015), 대학은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쌓아나가는 곳이 아니게 되었다.

일례로, 2009년 서울대학교 교지 『관악』에 소개된 서울대학교 여성주의자 연대체인 ‘여모(여성주의자 모임)’¹⁷의 당시 상황은 이 시기 대학 여성운동 조직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대학사회의 기본 공동체”가 “붕괴”되고, 여기에 “여성주의자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시각들이 합세하면서(『관악』, 2009/6/23), 2000년대 중반 이후 대학은 더 이상 여성주의자 재생산의 공간이 아니게 되었던 것이다(가온, 2018: 78).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 여성주의 단체들은 선배의 부재와 조직의 약화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운동의 지속성을 잃게 되었다(한종태, 2014: 48). 1990년대 후반 반성폭력운동을 비롯해 서울대 내 여성운동을 이끌었던 ‘여모’ 역시 2000년대 중반 이후 잠정적 해단과

17 해당 글에서 ‘여모’는 서울대학교 내의 여성주의자들의 연대체인 〈관악여성모임연대(관악여모)〉, 〈사회대여성주의연대〉, 〈사범대여성주의자모임〉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사용되었다(『관악』, 2009/6/23). 대표적으로 〈관악여성모임연대〉는 수직적인 학생회 체계를 지양하면서 1997년 서울대학교 내의 여성운동모임의 연대체로서 발족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관악여성주의자모임〉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재결성을 반복하게 되었다(『관악』, 2009/6/23).

사실 구성원 재생산의 문제는 현재의 대학사회에서 여모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는 학생회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위들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대학사회의 기본 공동체인 과/반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학생회와 같은 더 큰 단위의 기구들은 자연스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모 또한 여기서 예외일 수 없었다. (중략) 여모 활동가 층원의 어려움은 위의 이유들에 더해 여모가 여성주의자 모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구성원의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데서도 비롯된다. 여기에는 여성주의자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면서 '폴페미'로 몰아붙이거나 과격한 발화자, 역(逆)성차별자, 여성우월주의자로 보는 시각들이 관여해 여성주의자의 틀을 더욱 한정시키고 있다. (『관악』, 2009/6/23)

이처럼 대학 여성운동이 이전 세대 운동의 명맥을 이어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여학생회는 그나마 대학 내에서 여성운동의 구심점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학칙 상 그 지위와 예산·공간 등의 자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총여학생회의 활동도 점차 위축되었다. 아래 <표 1>은 서울과 각 지역의 주요 대학들에서 2005~2016년 사이의 기간 동안 총여학생회가 당선되어 활동했는지 여부를 표시한 것이다. 해당 기간 동안 연세대와 경희대, 경상대, 제주대 등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많은 대학들은 총여학생회의 구성조차 불안정했다. 예를 들어 광운대, 서울시립대는 총여학생회가 10년 이상동안 아예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성균관대 역시 2009년 이후 총여학생회가 출범하지 못했으며 한양대, 중앙대, 동국대, 숭실대 등에서도 안정적으로 활동이 이어지지 못했다.

〈표 1〉 2005~2016년 주요 대학 총여학생회 활동 여부¹⁸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건국대	○	○	×	○	○	○	○	×	폐지			
경북대	×	×	×	×	×	×	×	×	×	×	×	×
경상대					○	○	○	○	○	○	○	폐지
경희대	○	○	○	○	○	○	○	○	×	○	○	○
광운대			×	×	×	×	×	×	×	×	×	×
동국대	×	×	○	×	○	○	○	○	○	○	×	×
부산대	×	×	×	×	×	×	×	폐지				
서울시립대	×	×	×	×	×	×	×	×	×	×	×	×
성균관대	×	○	×	×	○	×	×	×	×	×	×	×
송실대	×	×	×	×	×	×	×	○	○	○	○	폐지
연세대	○	○	○	○	○	○	○	○	○	×	○	○
전남대	○	○	×	×	×	×	○	○	○	○	○	×
제주대	○	○	○	○	○	○	○	○	○	○	○	○
중앙대	○	○	○	○	×	×	○	×	×	폐지		
한양대	○	○	○	×	×	○	○	○	○	○	×	×

2000년대 중반 이후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의 대학 진학률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연세대(1999)를 시작으로 고려대(2000), 중앙대(2002), 서울대(2004), 부산대(2006), 한양대 안산캠퍼스(2007), 전남대(2009), 충북대(2010), 경북대(2013) 등에서 ‘최초의’ 여성 총학생회장이 당선되는 등의 변화가 발생했다. 이는 곧 대학 내의 성차별이 해소되었다는 지표로 읽혔고, ‘독자적’ 학내 여성운동의 ‘불필요성’론이 대두하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 총여학생회는 이제 학내 역차별의 대표적 상징으로 부각되어 ‘존폐론’의 대상이 되었다. 예를

18 서울 시내 주요 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을 대상으로 위 표를 작성했으며, 각 대학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총여학생회’라는 검색어로 기사를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는 총여학생회가 당선되어 활동한 해를 의미하며, ×는 공석 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남은 해를 의미한다. 빈칸인 부분은 당해의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이 시기 총여학생회와 관련한 어떠한 데이터도 구할 수 없는 학교들은 위 표에 포함하지 못했으며, 연구자의 한계로 전국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자료의 한계임을 인정한다. 또한, 위 표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일찍이 총여학생회가 폐지되고 다른 여성집단인 1990년대~2000년대 초반까지 융성했던 대학 여성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 총여학생회가 폐지되고 이후 설립된 〈관악여모〉가 학내 여성운동을 이끌었으며, 고려대에서는 1989년에 총여학생회가 폐지되고 1992년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로 설립된 여학생위원회를 이를 대신했다.

들어, 연세대학교에서는 2007년에 “총여학생회의 예산은 남학우들이 낸 총학생회비에서 배정되는데 이런 점이 수혜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총여학생회 폐지를 포함한 학생회칙 개정안이 학생총투표 안전으로 상정된 바 있다(연세춘추, 2007/3/19). 경희대학교에서는 2015년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6-7개의 대자보가 게시되며 오프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학생들이 “교내에서 받는 차별”이 과연 있는지, “총여학생회는 여학생을 위한 조직이면서 남성의 자치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하지는 않는지가 당시 가장 큰 이슈였다(대학주보, 2015/4/20). 총여학생회 존폐 논란은 논쟁에서 그치지 않고, 건국대(2013), 중앙대(2014), 홍익대(2015), 숭실대(2016) 등 여러 학교에서 총여학생회가 실제로 폐지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제 대학 여성운동은 ‘역차별,’ 또는 ‘여성우월주의’가 아님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아래의 인터뷰들과 같이 총여학생회는 매년 출마·당선 당시, 존폐론 혹은 역차별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남녀 모두’를 위한 것을 강조했다.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에게까지 열린 총여학생회”에 대한 강조는 남녀 모두의 총학생회비로 운영되는 총여학생회가 여성의 이익만을 위한 단체가 아님을 설득하고자 함이었다. 그동안 대학 내에서 여성운동과 총여학생회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남학생들의 불이익과 불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에 당면했던 것이다.

남성·여성 모두를 외락 안아줄 수 있는 총여학생회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다. 단지 여학생들의 의견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남학생들이 남자라는 성으로 인해 겪는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숭대시보, 2013/3/18)

존폐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해야하는 부분이다. 경희 구성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총여학생회가 되도록 하겠다. (중략)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에게

지 열린 총여학생회로 만들고 싶다. (대학주보, 2009/11/30)

남학우들도 총여회비를 지불하지만 남학우와 총여와의 소통이 적다는 문제제기는 끊임 없이 이뤄져왔다. 이에 총여는 올해 활동의 기조로 남녀 공동 참여를 내걸었다. 강씨는 “모든 행사를 기획할 때 남학우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세춘추, 2012/11/10)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학 여성운동은 학내에 존재하는 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했다. 2006년 중앙대를 시작으로 연세대, 경희대, 고려대(2007) 등 많은 학교에서 시행되던 ‘생리공결제’는 이 시기 대학 여성운동의 대표적인 성과다. 반복되는 강의실 내에서의 성차별적 발언, 언어성폭력 등을 시정하기 위해 여성주의적 강의평가 실시, 신고센터 운영 등의 활동도 많은 학교들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성차별이 이미 해소되었다고 여겨지는 대학 사회에서 대학 여성운동은 더 이상 이전 시기와 같은 급진적인 담론 생산에 동력을 집중하기 어려웠다.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권력 관계를 폭로하기보다, 주로 제도나 복지 사업을 통해 여성들이 겪는 일상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대 총여학생회는 여학생의 ‘수업권’과 ‘건강권’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생리공결제의 시행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중대신문, 2006/5/22).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2010)와 한양대학교 총여학생회(2013)는 강의실 내에서의 차별적 발언 및 언어성폭력을 “여학생 교육권 침해” 혹은 “수업권 침해”로 규정하고 강의평가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거나 신고 창구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히 학내 제도들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여성들이 일상의 권리(교육권, 건강권, 안전권, 휴식권 등)를 되찾을 수 있도록 했으나, 여성의 주변적인 위치와 여성/뒀의 경험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관한 정치적인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해내거나 성차

별적 구조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총여학생회에서는 여학생 교육권을 위해 여성주의적 강의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객관식 항목에 이어 지난해에 주관식 강의평가 항목이 생겼습니다. 수업 시간에 성평등하지 않은 발언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는 것과 더불어, 그 수업을 들어가기도 싫어지는 것은 명백한 여학생 교육권 침해입니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2010)

강의실은 개인의 능력과 역량이 존중되고 평가되는 공간이다. 그런 공간에서 수업과 무관한 차별이나 배제, 소외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수업권을 침해받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양대학교 총여학생회, 2013)

2000년대 중반 이후 대학 여성운동은 '제도화'된 한국 여성운동의 영향과 대학 공동체 붕괴라는 배경 속에서 진행되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여성운동은 '진보적' 정부와 협력적 관계 속에 다양한 제도적인 성취를 이루어냈지만, 운동성의 '탈급진화'라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사회전반 뿐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역차별' 담론이 확산되고 여성은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대학 여성운동은 그 자체로 '역차별'의 상징으로 공격받게 된다. 1990년대 대학 여성운동의 주된 의제였던 성차별과 성폭력에 관한 담론은 자연스럽게 그 호소력을 상실해갔다. 총여학생회의 잇따른 폐지에서 볼 수 있듯, 조직의 재생산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 위기들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을 개발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V. 2010년대 중반~현재: 경계를 넘어서는 운동의 확장

운동이 점차 위축되었던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의 상황과 달리,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대학 여성운동은 다시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한다. 그 배경에는 약 10년간 진행된 보수정권과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화의 가속화 속에서 축적되어온 ‘모순’이 존재했다.

2000년대 이후 국가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전개되어 왔던 한국 여성운동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 제도적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게 된다. 집권 초기부터 광우병 촛불집회로 인해 난처한 상황을 겪었던 이명박 정부는 이후 시민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식을 택했다(민중의소리, 2017/9/29). 촛불 시위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불법 시위를 주축·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를 정부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불법시위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의해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확인서 제출을 거부했고,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 선정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겪었다(신상숙, 2011: 181-183).

보수정권 하에서 여성운동은 여성정책에 대한 영향력도 크게 잃었다. 정부가 시민운동을 노골적으로 규제하자 여성운동은 정치적 배제의 위협과 더불어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도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신상숙, 2011: 155). 출범 초기, 이명박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초미니 형태의 여성부로 크게 축소하였고, 이후 2010년 가족업무와 청소년 업무를 결합하여 다시 여성가족부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보수적인 가족정치와 결

합하였고, 성평등을 위한 정책적 관심은 사라졌다(배은경, 2016: 32). 이와 같은 기조 하에서 진보적 여성운동과 정부 간 협력은 실종되었고, 여성운동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의제에서 여성정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현저히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권수현, 2011: 36). 진보에서 보수로의 정권 교체는 여성운동에 있어서 정치적 기회구조를 매우 불리하게 변화시켰으나, 진보정권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여성운동이 제도화되면서 나타났던 한계들 역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신상숙, 2011; 김경희, 2009; 권수현, 2011).

이러한 상황에서 성평등과 멀어진 정부 정책은 젠더 불평등을 시정하기는커녕 외면하거나 심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전면화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여성들의 전반적인 삶은 한층 더 불안해졌고, 노동 시장에서 역시 여성은 비정규직화되거나 저임금, 차별임금, 경력단절의 심화 등 고용조건이 악화되었다(강이수, 2013; 배은경, 2009). 여성들은 정책적 지원의 공백 혹은 실패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시장 재편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개별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김보명, 2018: 124).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양적으로 늘어난 여성의 경제 참여와 교육 기회의 확대 등의 지표는 여성이 이미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획득했다는 ‘평등’의 신화를 낳았다. 2000년대 이후부터 계속된 안티페미니즘 정서는 더욱 일상화되었고,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여성혐오 문화는 점차 확산되었다. 여성들이 처한 구조적 불평등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삶의 한 측면이 되었다. 불안정해진 삶의 조건과 이를 시정하지 못하는 정책·제도, ‘여성상위’ 시대라는 ‘신화’ 속에 여성들의 삶은 ‘모순’으로 점철되었던 것이다.

2010년대 중반이 되자, 이 같은 누적된 ‘모순’이 표면 위로 올라오게 된

다. 우선, 온라인의 10대, 2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메갈리아, 미러링¹⁹ 등의 실천이 등장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성혐오에 대해 저항적 반격이 시작되었다(정인경, 2016; 장민지, 2016; 김수진, 2016).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이러한 변화는 구조적 모순을 개인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받았던 ‘젊은’ 여성들이 그 요구의 불가능성을 깨달은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김보영, 2018; 손희정, 2015; 나영, 2017). 국가의 정책과 제도가 여성의 삶의 억압적 측면들을 해결해주지 않음을 목도한 이들이 오프라인 공간에 집합적으로 등장한 계기는 2016년의 ‘강남역 살인사건’이었다. 여성이 일상적으로 겪는 구조적 폭력의 맥락을 소거하는 당시 경찰과 정부의 허황된 대책은 많은 여성들의 공분을 샀고, 이들은 ‘묻지마’ 살인 사건이 아니라 ‘여성혐오’ 범죄이자 ‘여성 살해’라고 명명하며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거리에 나왔다(정용림·이나영, 2018: 202).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학 여성운동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다. 먼저, 2000년대 중반 이후 학내에서 모습을 감췄거나 조직 재생산이 힘들었던 여성주의 모임들이 다시 등장했다. 각 대학에서는 2016년을 전후해 여성주의 소모임, 학회, 동아리 등이 개설되었다(조선일보, 2018/9/17; 여성신문, 2020/3/6). 이들은 페미니즘 강연, 세미나, 수다회, 토론회 등의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학내에 부족한 여성학 수업을 대신해 여성주의적 인식론과 언어를 습득해나갔고, 이를 바탕으로 학내에서 발생하는 젠더 문제를 학생 사회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2018년에 대학가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된 ‘미투(#MeToo) 운동’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교수, 선배 등 다양한 가해자로부터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19 ‘메갈리아’는 2015년 6월 메르스 바이러스가 확산되던 시점에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개설된 ‘메르스 갤러리’에서 파생된 사이트를 지칭한다. 이들은 이전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었던 유명한 여성혐오 글들을 패러디하는 방식(미러링, mirroring)으로 여성혐오에 저항하는 담론과 언어들을 생산해내었다(장민지, 2016).

연이은 고발은 “대학 사회 역시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대학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자각을 불러 일으켰다(중앙대학교 성평등위원회, 2018/3/11; 3.8 대학생 공동행동, 2018/3/6). 이는 대학이 상대적으로 성평등한 혹은 안전한 공간이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주류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의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여성들은 학생회, 여성주의 모임, 대학원생 등과 연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연대모임 등을 만들어 사건 해결에 힘썼다.

대학 내 ‘미투 운동’은 성평등상담소, 양성평등센터, 인권센터 등 학내 사건처리 기구를 통한 제도적 해결방식의 한계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학내 사건처리 기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지르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일이 발생하는가하면, 가해자에 대한 가벼운 징계와 불투명한 사건 처리 과정 속에서 오히려 취약한 위치에 놓인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대학 ‘미투 운동’은 가해자에 대한 비판과 징계 요구에서 그치지 않고, 반복해서 일어나는 학내 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학내 사건처리 기구의 운영을 민주화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잇달았다. ‘인권센터의 폐쇄성’ 규탄, 인권센터의 운영과 사건 해결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권 보장’ 등의 주장이 등장한 배경이다. 학생을 논의의 주체로 인정하여 내부적인 견제와 균형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인권센터가 “권력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3.8 대학생 공동행동, 2018/3/28). 예를 들어, 동국대에서는 총여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학내 여성주의 모임 등이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인권센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10대 학생 요구안’을 인권센터에 제출했다. 그 결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인권센터에서는 메일을 통해 인권센터 규정 개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화여대의 경우, 징계결과를 공유하지 않는 학교 당국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 규탄 이화인 집회’ 등을 통해 대응하였고, 이후 설립된 인권센터는 사건 처리 결과를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이

인권센터는 구성원과 함께 센터의 기조 및 방향을 설정하고, 운영, 사건 해결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또한, 인권센터 운영 및 사건 해결과정에 학생 참여, 공동체적 해결을 넘어, 이를 바탕으로 한 독립성 보장 및 권한 강화,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른 규정 마련,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 등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동국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대에서도 인권센터 규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이대, 인천대 등에서는 학생들이 인권센터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함을 적극 외치고 있다. 교육부 또한 인권센터의 독립성 강화와 더불어 학생 참여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인권센터 역시 현재 개정 과정의 폐쇄성을 인식하고 이를 구성원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국대학교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쿵광, 2018/7/4)

다른 한편, 사건처리 기구를 통한 제도적 해결방식의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공동체적 해결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대학 여성운동가들은 “성폭력은 공동체의 문제”이며 “단순히 사법적 처벌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성폭력이 구성되는 문화에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해야” 함을 강조했다(특지, 2018/12/12). 따라서 남성중심적인 문화를 성찰하기 위해 더 많은 여성의 목소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를 정치화할 수 있도록 학생 자치기구와 학내 페미니즘·인권 단체 등 학생 사회의 역할을 촉구하였다.

성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학생 사회의 역할이 어느 시기보다 강조되던 때, 모순적이게도 총여학생회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대학가에 또다시 부상하였다. 2018년 한 해에만 울산대, 동아대, 연세대(신촌캠), 단국대, 성균관대(인사캠), 중앙대(안성캠), 광운대, 동국대(서울캠) 등에서 총여학생회가 연달아 폐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더 이상 학내에서 소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총여학생회가 필요 없으며, 여학생만이 투표권을 가지는 기구에 남학생의 학생회

비까지 사용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익숙한 문법이 반복되었다.²⁰

학생 자치기구, 학생대표자회의, 학생총투표 등 학내 ‘민주주의’ 시스템을 통해 총여학생회가 폐지되자, 대학 내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흐름을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backlash)’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에서 총여학생회 폐지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성균관대 성평등 어디로 가나〉는 일정 인원 이상의 서명을 거치기만 하면 “사유와 대안 없이” 학생총투표를 통해 총여학생회 폐지를 거칠 수 있었던 시스템을 문제 삼으면서 이와 같은 절차가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를 그대로 용인했음을 지적했다. 학생 자치와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 오히려 대학 여성운동을 억압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올 한 해에만 총여를 없애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학생대표자들을 수없이 마주하고 있다. 성균관대에서는 10년 만에 총여 입후보 희망자가 나오자 ‘대의원’으로 추정되는 60명의 서면발의안을 총학생회가 투표관리위원회의 회람 한 번 없이 받아들였고, 사유와 대안 없이 총여 폐지 총투표가 진행되었다. (중략) 이제는 동국대에서 이와 거의 유사한 방식에 500명 서명만 있으면 총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회칙에 신설하는 만행까지 더해, 학생대표자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가해온 백래시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성균관대 성평등 어디로 가나, 2018/11/19)

그러나 ‘미투 운동’에서 나타난 학내 사건처리 기구의 한계와 총여학생회 폐지에서 드러난 학생 자치기구의 한계는 대학 여성운동의 위축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방식의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예를 들어, 중앙대는 ‘미투 운동’과 총여학생회 폐지 이후 〈중앙대 반성폭력 반

20 예를 들어, 동국대학교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총여학생회의 역할과 정체성의 혼란”, “총여학생회 학생회비 사용의 논란”, “남학생들의 총여학생회에 대한 학생회비 납부와 투표권 부재” 등을 이유로 총여학생회의 폐지가 학생총투표 안건으로 상정되었다(동국대학교 50대 총대의원회, 2018/11/15).

성매매 모임 반(反)〈이하 ‘반’〉을 출범시켰다. 출범 당시, 〈반〉은 “학내 여성 혐오 역사를 규탄”하고, “남성 중심적 문화를 해체”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았다. 이후 이들은 총여학생회나 성평등위원회 같은 학생회 체계 바깥에서 여성운동을 만들어나가고자 했다. 대표적으로, 2019년 5월 성평등위원회의 페미니즘 사업을 총학생회가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일이 발생하자, 〈반〉은 ‘페미니스트 총궐기’라는 제목의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약 250명이 참가했는데(연합뉴스, 2019/5/30), 중앙대 페미니스트들 뿐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숙명여대, 성균관대 등 여러 대학의 단체들도 참가하며 대학 페미니스트들이 연대하는 장이 마련되기도 했다(중앙일보, 2019/6/2).

개별 대학 캠퍼스라는 물리적 장소와 경계를 넘어 페미니스트들 간 연대를 모색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9월 창립된 〈유니브페미〉는 “잇따른 총여학생회 폐지 총투표 이후, 각 대학에서 외롭게 싸우는 페미니스트들을 연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고(유니브페미, 2019/7/29), 2020년 5월 기준 30여개 대학에서 160명 이상의 회원이 모집되었다(오마이뉴스, 2020/5/6). 이들은 한 대학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대학 전반을 가로지르는 의제를 설정하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각 대학의 성평등 제도 현황을 조사하여 성평등 지표로 대학을 평가하거나(유니브페미, 2019/12/6),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 성평등/인권 관련 정책질의서를 보내는 등의 활동이 그 예이다(유니브페미, 2019/12/3).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는 “총여 폐지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망언을 하며 간담회 하루 만에 총여를 폐지했다. (중략) 총여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던 인권센터는 정작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기계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 (중략) 여전히 더 많은 여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며, 이를 종합하여 정치적 실천으로 이어나갈 자치 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내에는 성폭력 피해 학우와 연대하며, 추악한 남성 권력을 직시하고 이를 해체하기 위한 집단적인 움직임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현

재까지 만연한 학내 여성 혐오 역사를 규탄하고, 성폭력 피해학우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남성 중심적 문화를 해체시키기 위해 반성폭력반성매매모임 '반(反)'을 출범한다. (중앙대 반성폭력 반성매매 모임 반(反), 2019/3/31)

이처럼 2010년대 중반 이후 대학 여성운동가들은 대학 내 '미투 운동'을 이끌며 학내 젠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키며 이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기존의 제도와 조직적 한계에 직면했다. 1980년대 중반 여성 억압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던 대학 내의 여성들이 조직한 총여학생회는 학생총투표를 통해 대학가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고, 1990년대 대학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던 학내 성폭력 사건처리 기구들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운동 방식이 처한 '위기'는 대안적 조직 구성과 운동 방식의 고민과 확장이라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기도 했다.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다시금 중요한 정치적 의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학은 '젊은 여성'들의 주요 생활공간임과 동시에 사회적 '모순'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한국 대학에서 이제 페미니즘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제이자 저항의 도구가 되었다.

VI. 결론

본 연구는 현재 대학 여성운동을 둘러싼 지형이 단순히 '영영 페미니스트'와 '20대 남자' 간 갈등과 대립으로 해석되는 경향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1980년대부터 남성 지배적 사회와 각 시대의 부정의에 저항해 온 대

학 여성운동의 역사를 탈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학 여성운동의 역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 여성운동 당사자들이 생산한 정기 간행물·자료집, 입장문·성명서와 학내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정치적 변동 속 ‘대학(운동·사회)’과 ‘한국 여성운동’이라는 이중적 기회구조 하에 대학 여성운동이 어떤 의제를 어떻게 발전시켜왔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80년대 대학 여성운동은 폭압적 군사 정권 하에서 한국 사회를 변혁함으로써 여성 해방을 이룩하려던 당대 진보 여성운동과 조응하며 태동했다. 1970년대부터 여학생부, 비밀서클 등을 중심으로 여성의식을 축적하고 운동권 내 남성중심적 문화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져왔던 대학 내 여성들에게, 1983년 12월 발표된 전두환 정권의 학원자율화조치는 이중의 효과를 야기했다. 한편으로 총학생회와 더불어 총여학생회라는 독자적 자치조직이 출범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조된 민주화 운동의 열기 속에 독재 타도, 민주화 등 보편적 문제의 하위 문제로 여성문제가 수렴되는 경향을 목도한다. 그럼에도 이 시기 대학 내 여성들은 여성 억압을 군사 독재 정권, 식민 지배 역사, 자본주의 체계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 속에 위치시키하고자 하였다.

여성 억압에 대한 인식의 축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변화된 정치적 기회구조 속에서 대학 여성운동이 독자적인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6월 항쟁 이후 다른 시민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양적으로 증가한 여성운동단체는 한국 여성운동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치열한 고민 끝에 독자적 노선을 걷게 된다. 특히 1993년 김영삼 정권 이후, 여성운동단체들은 여성 인권과 관련된 법제화 운동을 이어가다가 하면 성폭력 문제를 ‘가부장제의 문제’로 분명히 하였다. 이 시기 성폭력 사건들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은 대학 여성운동 단체들과 연합전선을 형성했다. 이에 조응하듯 대학 여성운동은 반성폭력 운동을 주요 의제

로 설정하고, 여성문제의 보편성, 젠더 권력과 성(sexuality)의 분리 불가능성을 주장하며 ‘성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했다. 그 결과 대학 내 반성폭력 학칙 제정 등 가시적인 변화들을 성취했으며, 이를 통해 대학 공동체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자 했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해 한국 여성운동과 대학 사회가 질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이러한 노력들은 대학 내에서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한국 여성운동은 1990년대 말부터 진보 정권과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 정치세력화에 성공하며 다양한 제도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점차 법적 언어의 틀 속에서 급진성과 대중성을 잃었다고 평가받고, 운동이 성취한 정책적·제도적 변화가 ‘여성 상위시대’ 혹은 ‘역차별’ 담론의 파생 원인이라는 비난까지 받게 된다. 한편으로 급속도로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대학 교육 정책은 대학을 효율적 관리의 대상이자 경쟁의 공간으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기존 ‘대학 공동체’가 와해되기 시작했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여성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추월하고, 일부 대학에서 여성이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자, ‘성평등의 신화’가 대학가를 흔들게 된다. 실제 200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대학에서 총여학생회가 폐지되고 여성주의 담론은 그 호소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대학 여성운동은 이전의 여성운동이 역차별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1990년대 이후 강조되었던 권력 구조의 해체라는 목표를 수업권, 건강권 등 권리의 언어로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 다시금 학내의 성차별 구조를 변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등장한 것은 그동안 한국 사회 내 축적된 ‘모순’의 폭발과 관련이 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보수 정권 하에서 여성운동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크게 잃었고, 정부와 여성운동의 관계가 느슨해지면서 국가 주도의 여성정책은 성평등의 기초를 잃었다. 여성정책은 가속화되는 신자유주의화에 따른 여성들의 삶의 위기와 악화된 젠더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구조적 불평등의 부정적 효과를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개인 여성들은 2010년대 중반부터 온라인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을 기점으로 집합적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대학 여성운동 또한 학생 사회를 학내 젠더 문제의 해결의 주체로 호명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운동은 학내 사견처리 기구와 학생자치의 한계에 부딪혔으나 이는 대학 여성운동을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운동의 확장성과 다양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더 이상 학교나 학생회라는 기존의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물리적 공간과 이념적 조직을 넘나들며 다른 페미니스트 주체들과 조우하고 연대하고 있다.

한국 대학 여성운동을 역사화한다는 것은 운동의 흥망성쇠를 기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대학 여성운동이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학과 여성운동이라는 이중적 기회구조 속에 한국 사회의 거시적인 정치·사회적 변동과 역동적으로 관계 맺으며 변화해 왔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현재 대학 내에서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의 투쟁을 단순히 생물학적 남녀 간 대립이나 갈등으로 곡해하는 방식은, 대학을 젠더 권력의 기제로서 상징하고 투쟁해온 오랜 여성들의 역사를 소거하거나 폄하하기에 문제적이다.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과거 운동의 성과와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운동의 굴절된 결과들이 현재의 기회구조 하에서 어떻게 운동의 지형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이다. 이를 통해 곧 현재가 될 미래의 우리 운동을 다시 상상해 보는 일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 가은. 2018. “2007년 총투표 이후 총여학생회의 정치: 여성주의 정치, ‘민주주의’의 프리즘.”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포럼 2018〉 자료집, 73-86.
- 강남식. 2004. “한국여성운동의 쟁점과 방향.” 한국여성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 강내희. 2013. “변혁운동의 거점에서 신자유주의 지배공간으로: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대학.” 『역사비평』 104호, 65-88.
- 강이수. 2013. “여성주의 연구를 돌아보다: 여성운동, 노동, 가족 연구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00호, 229-250.
- 곽복희. 1995. “독자적 여학생 조직을 만들기까지.” 『여성과 사회』 6호, 19-24.
- 『관악』. 2009/6/23. “여모 is for everybody.”
- 관악여성모임연대·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성정치위원회. 1998/5/19. 『제1회 페미니즘 문화제 - 있다 Let There Be Us!』.
- 권김현영. 2015.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엇을 보호하는가?” 『인물과사상』 113-126.
- 권수현. 2011. “여성운동과 정부, 그리고 여성정책의 동학: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0권 1호, 7-47.
- 권인숙. 2005. 『대한민국은 군대다』. 서울: 청년사.
- 김경희. 2005. “여성정책 관점의 재구성을 위한 이론적 연구.” 『한국여성학』 21권 2호, 255-287.
- . 2007. “법제화 운동을 중심으로 본 한국여성운동의 제도화와 위기론.” 『社會科學研究』 15집 1호, 108-141.
- . 2009. “신자유주의와 국가페미니즘.” 『진보평론』 40호, 14-32.
- 김경희·신현옥. 2004. “정책과정을 통해 본 젠더와 평등개념의 제도화.” 『한국여성학』 20권 3호, 171-206.
- 김덕련·이상술. “[특집:대학개혁과 한국 사회]대학구조조정과 학생사회의 대응-학생사회의 대안 전략’을 위한 제언.” 『경제와사회』 43호, 90-110.
- 김동인. 2018. “남성 손에 엇갈린 총여학생회의 운명.” 『시사IN』 (7월 3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90> (검색일: 2020. 5. 9).

- 김미현. 2020. “총여학생회 폐지 과정을 통해 본 대학 내 주체들의 분열과 경합의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민석. 1992. “내가 겪은 미문화원 점거농성과 서울대총학생회장 시절.” 『역사비평』 16호, 256-271.
- 김보라. 2009. “모든 구성원에게 열린 총여가 될 것.” 『대학주보』 (11월 30일), http://media.khu.ac.kr/khunews/view.asp?code1=1012006022801&code2=2006022810000001&headline=&kha_no=8656&page=4&search=&keyword=%C3%D1%BF%A9 (검색일: 2020. 5. 9).
- 김보명. 2008. “1990년대 대학 반성폭력 운동의 여성주의 정치학.” 『페미니즘 연구』 8권 1호, 191-217.
- . 2018. “페미니즘의 재부상, 그 경로와 특징들.” 『경제와사회』 118호, 99-138.
- 김보은·김진관 사진 공동대책위. 1992. 『이제, 더 이상 침묵할수 없다』.
- 김서현. “[나는 강남역 세대입니다①] 내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행동한다.” 『여성신문』 (3월 6일),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762> (검색일: 2020. 5. 9).
- 김수진. 2016. “여성혐오, 페미니즘의 새 시대를 가져오다.” 『교육비평』 38호, 163-188.
- 김수현. 2019. “인권센터 조항 신설, 징계 결과 외부 공개 가능해졌다.” 『이대학보』 (9월 30일), <https://inews.ewha.ac.kr/news/articleView.html?idxno=31329> (검색일: 2020. 5. 9).
- 김인혜. 2017. “1980년대 중반 진보적 여성단체의 연대활동.” 성신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정희. 2011. “정치적 기회구조가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분권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5권 3호, 29-54.
- 김채린. 2018. “[취재후] 총여학생회의 퇴장…그 속에서 우리가 본 것들 ①.” 『KBS』 (12월 5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87291> (검색일: 2020. 5. 9).
- 김철선. 2019. “중앙대 페미니스트 총궐기…“대학 내 反페미니즘 규탄한다”” 『연합뉴스』 (5월 30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530185000004> (검색일:

2020. 5. 9).

김혜숙·조순경. 1995. “화제의 논문/「민족민주운동과 가부장제」 최초로 제기하는 ‘민족민주운동권’의 성차별: ‘진보적’ 운동권의 뿌리깊은 성차별.” 『월간 사회평론 길』 95권 8호, 142-150.

김효정. 2006. “‘여학생공결제’ 다음학기부터 시범시행.” 『중대신문』 (5월 22일), <http://new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38> (검색일: 2020. 5. 9).

나영. 2017. “모순과 혐오를 넘어 페미니즘 정치를 향하여.” 『황해문화』 97호, 98-116.

남윤서. 2019. ““페미니즘 싫어” 잇따른 대학가 대자보 훼손, 처벌할 수 있나.” 『중앙일보』 (6월 2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486122> (검색일: 2020. 5. 9).

녹지. 2018/12/12. “우리의 #metoo는 계속되어야 한다.”

동국대학교 총대의원회. 2018/11/15. “동국대학교 학생총투표 시행공고.”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1985.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칙.”

동국대학교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쿤광. 2018/7/4. “인권센터의 문은 언제까지 닫혀있을 것인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한국의 진보적 여성운동과 여성평우회.” <https://www.kdemo.or.kr/blog/dictation/post/617> (검색일: 2020. 5. 5).

박상현. 2018. “요즘 대학가 최대 세력은 운동권 아닌 '女권' 『조선일보』 (9월 17일),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7/2018091700030.html (검색일: 2020. 5. 9).

박상희. 2017. ““블랙리스트 시민단체 보조금 배제” 근거 조항 사라진다.” 『민중의소리』 (9월 29일), <http://www.vop.co.kr/A00001207502.html> (검색일: 2020. 5. 9).

배은경. 2000. “군가산점 논란의 지형과 쟁점.” 『여성과 사회』 11호, 92-114.

_____. 2009. “경제 위기와 한국 여성: 여성의 생애전망과 젠더/계급의 교차.” 『페미니즘 연구』 9권 2호, 39-82.

_____. 2015. “권력형 성희롱·성폭력의 문제해결과 대학공동체의 역할.”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인권센터 공동주최 학술포럼 <대학 캠퍼스의 권력형 성희롱·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41-52.

- _____. 2016. “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여성학』 32권 1호, 1-45.
- 배재성. 2018. “동국대 총여학생회, 총투표 끝에 폐지…서울 대학가 ‘총여 전멸’.” 『중앙일보』 (11월 22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148959> (검색일: 2020. 5. 9).
- 3.8 대학생 공동행동. 2018/3/28. “3.8 대학생 공동행동 성명서: 미투 운동, 그 이후는 달라야 합니다.”
- _____. 2018/3/6. “3.8 대학생 선언: 여성들의 분노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 서두원. 2012. “젠더 제도화의 결과와 한국 여성운동의 동학.” 『아세아연구』 55권 1호, 162-192.
- 서울대학교 여성문제 연구동아리 협의회. 1993. “화학과 조교 성추행사건을 보는 우리의 견해.”
- 서울대학교 총여학생회 문화부. 1985/5/16. 『건강한 여성문화를 위하여』.
- 서울대학교 총여학생회 홍보부. 1984/10/8. 『해방』 창간호.
- 서울대학교 학도호국단 총여학생부. 1984/3/14. “제1차 각과 여학생 대표 및 씨클장 확대회의의 결과보고.”
- 성균관대학교 성평등 어디로 가나. 2018/11/19. “가부장제 먼저 폐지하라.”
-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사회여성연구회. 1985/6/4. 『성과 노동여성: 제3세계에서의 한국노동여성문제』.
-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1997/5/12. 『제4회 여성현실제 - 난, 여자야 당당한 여성으로서의 세상나기』.
- 손희정. 2015. “페미니즘 리부트: 한국 영화를 통해 보는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그 이후.” 『문화과학』 83호, 14-47.
- 신상숙. 2004. “대학 내 반성폭력 학칙의 특징과 개선 과제.” 한국여성민우회 대학내 반성폭력 워크숍.
- _____. 2007. “1980-90년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젠더정치: ‘국가폭력’과 ‘젠더폭력’의 맥락적 구성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6집, 227-266.
- _____. 2008. “제도화 과정과 갈등적 협력의 동학: 한국의 반성폭력운동과 국가정

- 책.”『한국여성학』 24권 1호, 83-119.
- _____. 2011.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거버넌스: 국가기구의 제도적 선택성과 여성 운동.”『페미니즘 연구』 11권 2호, 153-197.
- 신지민. 2019. “총여학생회 폐지, 백래시일까 새로운 시작일까.”『한겨레』 (1월 12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8111.html (검색일: 2020. 5. 9).
- 안규영. 2012. “신춘캠 24대 총여학생회 <연세 호(好) talk> 공약 이행 평가.”『연세춘추』 (11월 10일),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18186> (검색일: 2020. 5. 9).
- 안정희. 2010. “전두환 정권기의 유화국면과 학원안정법 반대운동: 야당·민주화운동 세력의 연대형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양성희. 2019. “대학가는 젠더전쟁 중.”『중앙일보』 (1월 19일), <https://news.join.com/article/23303466> (검색일: 2020. 5. 9).
- 임혜진. 2009. “운동사회 성폭력 의제화의 의의와 쟁점: 100인위 운동의 수용과 현재적 착중.”『페미니즘 연구』 9권 1호, 31-78.
- 여성평우회. 1983/6/18. “여성평우회 발기 취지문.”
- _____. 1984/6/18. 『여성평우』 창간호.
- 여학생 공동투쟁위원회. 1986/7/28. “투쟁 선언문.”
- 여학생연합 여학생추행사건 진상조사위원회. 1984/11/16. 『여학생 추행사건 사례 보고서: 폭력경찰의 여대생 및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적탄압사례』.
-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2010. “여성주의적 강의평가.” <https://web.yonsei.ac.kr/ysfem/> (검색일: 2020. 5. 10).
- 오마이뉴스. 2020. “총여학생회가 사라진 대학에서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5월 7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38205&fbclid=IwAR334s2ZNHA-E9B-KAMMEAR5UVjRo2lA6Ehg_dGfLPk4VBMEBtu_ffSVmpk (검색일: 2020. 5. 9).
- 오장미경. 2004. “여성운동과 정책참여(1987년 이후-현재).”『시민사회와 NGO』 2권 1호, 201-233.

- 원시연. 2007. “한국 여성정책의 변천에 관한 제도주의 연구.” 『韓國 政治 研究』 16권 1호, 191-216.
- 원혜빈. 2019. “1980년대 ‘여학생’의 문화정치: 남녀공학 대학 여학생 교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유니브페미. 2019/7/29. “유니브페미는 지금 발기인 모집중.”
- 유정미. 2019. “반격의 양성평등에서 (양)성평등의 재정립으로.” 『한국여성학』 35권 2호, 1-35.
- 윤정숙. 2004. “‘진보적’ 여성운동의 전환을 위한 모색.” 『창작과비평』 32권 3호, 55-69.
- 이다비. 2018. “학생들 무관심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대학가 총여학생회.” 『조선일보』 (6월 9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9/2018060900790.html (검색일: 2020. 5. 9).
- 이다혜. 2012.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과 정체성 형성: 2010년대 대학생 활동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이재경·김경희. 2012. “여성주의 정책 패러다임 모색과 성평등.” 『한국여성학』 28권 3호, 1-33.
- 이진우. 2015. “‘총여학생회 존폐논란’ 두고 대자보 갑론을박.” 『대학주보』 (4월 20일), http://media.khu.ac.kr/khunews/view.asp?code1=1012006022801&code2=2006022810000001&headline=&kha_no=22572&page=2&search=&keyword=%C3%D1%BF%A9 (검색일: 2020. 5. 10).
- 이창언. 2013. “NL(민족해방)계열 학생운동의 주류화와 한계.” 이호룡·정근식 편, 『학생운동의 시대』, 211-264. 서울: 선인.
- 이창우. 2007. “신촌캠 총학, “총여 대체기구 검토중”” 『연세춘추』 (3월 19일),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1> (검색일: 2020. 5. 10).
- 임봉. 2019. “우리가 있었다: 부산대학교 총여학생회의 탄생과 자체 종결.” 『여/성이론』 40호, 253-264.
- 임지혜. 2013.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를 ‘와락’ 안겠다.” 『숭대시보』 (3월 18일), <http://www.ssu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931> (검색일: 2020.

5.9).

- 장다혜·추지현·김석호. 2019.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18.
- 장민지. 2016. “디지털 네이티브 여/성 주체의 운동전략: 메갈리아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1권 3호, 219-155.
- 장준오. 1995. “80년대 학생운동의 담론 분석: 분석의 대준거틀로써의 민주주의.” 한 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37-151.
- 전수영·윤성희·서병수·이선주·박정재. 1993. “부산대학교 총여학생회 운동사.” 김형균 편, 『우리들이 쓰는 80년대 학생운동사』, 149-172. 부산: 여름3미디어.
- 전희경. 2001. “사회운동의 가부장성과 여성주의 정체성의 형성.”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정근식. 2013. “학생운동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호룡·정근식 편, 『학생운동의 시대』, 17-62. 서울: 선인.
- 정사강·홍지아. 2019. “국가 페미니즘, 여성가족부, 여성혐오.” 『미디어, 젠더 & 문화』 34권 1호, 209-253.
- 정용림·이나영. 2018. “‘포스트/강남역’: 성차별적 사회에 대한 집합적 저항과 페미니스트 주체 (재)구성의 가능성.” 『페미니즘 연구』 18권 1호, 181-228.
- 정인경. 2016.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인터넷 여성혐오.” 『페미니즘 연구』 16권 1호, 185-219.
- 조선대학교 총여학생회. 1986. 『불꽃』 제2호.
- 조주현. 1996.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80-90년대 한국의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 여성학』 12권 1호, 138-179.
- 중앙대 반성폭력 반성매매 모임 ‘반(反)’. 2019/3/31. “중앙대 반성폭력 반성매매 모임 ‘반’ 출범서.”
- 중앙대학교 성평등위원회. 2018/3/11. “대학 내 성폭력 고발 #METOO를 응원하며 #WITHYOU – 연대성명.”
- 지은희. 2003. “내부로부터 본 여성운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을 중심으로.” 김철 편, 『사회운동과 우리사회: NGOs의 오늘과 내일』, 99-149. 서울: 푸른사상.
- 진보를 위한 청년연대·들꽃모임·관악여성모임연대(추)·나란한성 빼박한 성·서울교대

- 총학생회·한양대여성위원회·연세대성정치위원회 The Other, 1996/10/15,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과 노출단속법에 대한 규탄 문화제 - 너희가 X를 믿느냐?』 자료집』.
- 최승원, 2009. “1990년대 후반 학생운동의 위기와 대응: 신 유형의 참여자와 운동 변화.” 『사회연구』 2권 2호, 101-142.
- 최현·김지영, 2007. “구조, 의미틀과 정치적 기회: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 『경제와사회』 75호, 251-281.
- 한소범, 2018. “확산되는 페미니즘, 사라지는 대학 총여학생회.” 『한국일보』 (11월 23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21641061461> (검색일: 2020. 5. 9).
- 한종태, 2014.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 연구: 활동가들의 ‘위기’ 경험 분석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1997/6/5, 『대학=성폭력 박물관』.
- _____, 1999/4/9, “성폭력 학칙 제정에 있어서의 원칙.”
- 한양대학교 총여학생회(한양대학교 21대 총여학생회 밀담), 2013. 『한양대 언어성폭력 자료집: 우리들의 외람된 수업만들기』.
- 허나운, 2000. “199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위기’담론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홍성수, 2011. “대학 내 반성폭력정책의 과제와 전망: ‘작은 것들의 정치’를 중심으로.” 『성평등연구』 15권, 29-53.
- 황정미, 2017. “젠더 관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공공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 『경제와사회』 114호, 17-51.
- Ferree, Myra M., and Mueller, Carol M, 2004. “Feminism and the Women’s Movement: A Global Perspective.” David A. Snow, Sarah A. Soule and Haspeter Kriesi, 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Social Movements*, 576-607. Oxford: Blackwell.

- Kitschelt, Herbert, 1986.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and Political Protest: Anti-Nuclear Movements in Four Democraci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 No. 1, 57-85.
- Koopmans, Ruud, 1999.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Some Splitting to Balance the Lumping," *Sociological Forum* 14, No. 1, 93-105.
- McBride, Dorothy E., and Mazur, Amy G, 2013. "Women's Policy Agencies and State Feminism," Georgina Waylen, Karen Celis, Johanna Kantola and S. Laurel Weldon, eds. *The Oxford Handbook of Gender and Politics*, 654-67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illett, Kate, 1970. *Sexual Politics*, New York: Doubleday.
- Stetson, Dorothy M., and Mazur, Amy G, 1995. *Comparative State Feminism*. London: Sage Publications.

정다울 · 이나영, 대학 여성운동을 역사화하기: 대학 사회 및 한국 여성운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투고일: 2020.5.11, 심사일: 2020.5.31, 게재확정일: 2020.6.8)